

전북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재취업 시 기업에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

170여명 채용 목표...코로나 여파로 지원 연장

전북도는 올해에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이 사업은 퇴직인력 고용 기업에 최대 9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됐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국내외 내수 부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까지 연장됐다. 도는 올해 170여명의 인력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 근무 이력이 있고 같은 업종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

직자를 관련 기업이 신규 채용 시 구인기업에 1인당 월 최대 250만원씩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위기지역인 군산 소재 기업에는 최대 10명, 이외 지역 기업에는 최대 5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직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를, 구인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등의 서류를 갖춰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접수한 시·군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격심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국내외 내수부진과 코로나19 사

태로 도내 다수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인력에게는 신속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인력 필요 기업에게는 생산력과 기술역량 증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김제 벽골제서 대규모 도수로 확인...“통일신라시대 축조”

도수로·보강시설 포함...대규모 방수로도 확인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내부의 도수로와 외부 경작지로 공급하는 대규모 도수로가 확인됐다. 김제시는 전라문화유산연구원

과 '벽골제 수문 추정지(수여개) 시굴조사를 벌여 벽골제(사적 제111호) 저수지 안쪽(埤內)에서 대형 관석으로 바닥시설을 만든 정교한 구조의 도수로(導水路)와 도수로 보강시설, 호안석축(護岸石築), 각종 생활유구 등을 확인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저수지 바깥에서도 자연지형을 이용한 대규모 방수로가 확인됐다. 도수로와 보강시설을 포함한 전체 너비는 최대 24m에 이른다. 도수로의 바닥은 0.9~1.5m 크기의 대형 관석을 깔았고 대형 관석 사이는 작은 관석이나 할석을 다듬어 빈틈없이 메꾸었다. 도수로의 남쪽 보강시설 끝에는 호안석축시설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도수로는 시굴조사 범위 바깥인

동쪽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재 확인된 규모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수로는 출토유물을 고려했을 때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번 시굴조사에서 발견된 도수로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조사된 고대·중세의 도수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축조방법도 정교해 우리나라 농업 고고학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며 "벽골제와 연계해 체계적인 보존·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벽골제는 삼국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대의 저수지로 그동안 7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제방과 수문의 규모, 형태, 축조방식 등 고대 토목기술의 양상과 변천과정을 확인했다.



충북 옥천군,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

충북 옥천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신매·월전 2·화동·점동·명터지구 등 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이들 지역의 하천과 교량정비, 다목적 가뭄방지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읍 소정천, 안남면 다락골천, 이원면 평촌천과 강청천, 청성면 구유천, 청산면 의지천 등 6개 지구 소하천 정비에도 45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자체사업으로 청산 인정소하천에 10억원을 들여 제방을 쌓고 호안, 소교량 등도 정비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선도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5월부터 국가하천 수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동이면 금암배수문 등 8곳(이원면 원동1·2배수문, 지탄1·2배수문, 장동1·2·3배수문)의 국가하천 수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방하천·소하천 응급복구와 하상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우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사·지장수목 등 재해 위험물제거를 위한 정비임차 예산 1억원도 투입한다. 고령도 옥천군 안전건설과장은 "하천 관련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면 재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공적관리로 유기전 주요 공정을 조기에 완료해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이슬 기자

세종시 '시티스마트 사업' 추진...193억원 투입

정보통신기술 활용...도시문제 해결

세종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티스마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실증·상용화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교통·주차장 등 도시문제를 해결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확충해 시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행복정과 협력해 한솔동·아름동·조치원 등 9개 동지역에 각 10개 내외의 사물인터넷(IoT) 환경감지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허브시스템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림 운영 개선사업을 통해 공영자전거(225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비 3억원을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스마트파킹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숲 확

성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 거버넌스 도입 등 3개 과제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옥외광고 사업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등 스마트 전력관리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헬스케어존도 추가로 구축해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티스마트 프로젝트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사업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시급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종합 운동장 건립 본격화

경남 김해시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를 개최할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실시계획 적격자를 23일 최종 선정하고 건립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공고했고 남양건설(주) 컨소시엄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지난 20일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 기본설계심의를 거쳐 조달청에서 개찰한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남양건설(주) 컨소시엄이 실시계획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의 공사추정금액은 1418억원으로 낙찰가는 1201억원(낙찰률 84.7%)이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시는 2023년 3월 김해종합운동장 준공을 목표로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계사 관불의식 재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관불의식이 열리고 있다. 조계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종교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 중단 권고에 해체됨에 따라 오늘 대웅전에서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다.

보은군의회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지난 23일 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용선 의장 등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저공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자동차 운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저공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자동차 운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 드론 조종사 양성

대전 유성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론(UAV) 조종사 양성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구는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전병훈(30·시설8급) 주무관이 지난 14일 교통안전공단(TS)에서 실시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대전시 공무원 중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한 같은 과 전원익(42·시설7급) 주무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전병훈 주무관은 공공 분야의 다양한 업무수요에 대응하고, 항공촬영 수요부서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자격증 취득에 나섰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 주무관은 전문교육기관에 3주간 방문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했고, 실기 시험을 위해 비행연습을 진행해 왔다. 현재 공무원이분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주무관은 자격증 취득으로 토지분할 측량, 각종 사업



지구 현황 파악 및 토지보상 현장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UAV)을 투입 약 1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드론으로 촬영한 고화질 공간정보를 △각종 안전훈련 △개발행위에 따른 현황분석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 타부서의 정책결정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각종 공간정보 관련 사업에도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